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본격화… 법사위 배분 최대 쟁점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놓고 대립 민주당, 18일까지 협상 마무리 목표 국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

국회가 제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각종 법안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은 전반기와 같을 전망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며 ‘반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체계·자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하면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석 수로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최보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쪽주와 법무부의 필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원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단, 지방선거 전 공식화했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은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개 중 12개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뒀지만, 서울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겹쳐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선관위 사태 관련 국조특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마칠 방침이다. 이에 당장 이번주 원 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시한을 정해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쟁점 상임위원인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여야, 선거관리 부실 규명 나선다

이르면 이번 주 국조특위 구성 위원 배분방식·범위 두고 이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이번 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어 여야가 어느 범위까지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

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통령 유류 순방에 대한 성과 지원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며 특위 구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 18명인 특위 위원 배분 문제에 서부터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9명씩 동수로 참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 범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표교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지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왜 청와대를 포함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번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관위 관리에 그동안 손 놓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선 현재 1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늘리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 전면적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선관위 구성과 위원 신분보장이 헌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중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조특위 계획서를 이번주 내로 처리하려면,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특위 출범 이후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교황청서 평화 메시지… 오늘 레오 14세와 면담

평화·연대에 관한 한국의 뜻 전해

이탈리아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박2일간의 바티칸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엔 성 바오로 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15일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청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 미사를 계기로 연설에 나섰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의 면담 그리고 특별미사에서 이루어질 대통령의 연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를 국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또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15일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한 후 파울린 교황청 국무원장(추기경)을 만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5월 레오 14세 교황 즉위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대한민국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교황과의 면담에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방향을 계기로 방북 요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직접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년 행사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처음 열린다.

/서예진 기자

증시 떠난 3.7조, 부동산으로 향했다

국토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서울 주택 구매에 2.4조 유입

올해 들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약 3조7000억원이 주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65%인 2조4000억원은 서울 주택 구매에 사용됐으며,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따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7254억9400만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서류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주식·채권을 매각해 마련한 주택 구매 자금의 65.5%(2조4396억원)가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됐다. 특히 강남구(3707억원), 송파구(3532억원), 서

초구(2904억원) 등 강남3구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고가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두드러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입에 사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0년 3.2%,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4.1%, 2024년 4.6%, 2025년 4.7% 등으로 5% 이내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 9.3%에 이어 4월에는 13.2%로 상승하며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1~4월 30대가 활용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1조2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1조876억원), 50대(8022억원), 60대 이상(4893억원), 20대(659억원), 20대 미만(1억원) 순이었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은 주식을 팔아 집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